

與 “경찰 못 민나” vs 野 “참사 재발 방지” 국조 공방

국힘 “수사 미흡하면 논의 가능” 민주 “정부 무능으로 156명 희생” 정의당 “국민이 국회 지켜보고 있어”

국민의힘 정진석 비상대책위원장은 10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野) 3당의 ‘이태원 압사 참사’ 국정조사 추진에 대해 “국정조사는 의회주의를 불모로 한 이재명 살리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반면 야당은 국정조사를 요구하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정의당 정위원장은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밀어붙이고 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특검과 충돌을 얘기하고 있다. 모두가 윤석열 대통령, 대통령실을 겨냥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요즘 민주당이 왜 이렇게 오버하는지 모르겠다. ‘대장동 그분’을 지키는 게 민주당의 존재 이유인가. 기승전 방탄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윤석열 정부를 퇴진시켜 ‘그분’에 대한 사법 처리를 없었던 일로 만드는 것이 민주당 목표였죠”라며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 보내는 나라다. 이 대표가 지은 죄, 없던 일로 하는 것이 불가능한 나라”라고 말했다. 또 “지금 강제 수사가 신속하게 진행 중이다. 수사 주체는 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서 이관시킨 경찰들”이라며 “자신들이 수사권을 모두 갖다 맡긴 경찰을 못 믿겠다면서 국정조사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수사권도 없는 국정조사로 뭘 밝혀내겠다

건가. 이 사람 저 사람 국회로 불러내서 고래고래 소리 지르고 끝날 국정조사, 훗날 보인다”며 “경찰 수사에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때 가서 국정조사든, 특검이든 논의하자”고 거듭 제안했다. 이와 관련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이날 “오만과 독선의 국정 기초 전환만이 총체적 난국을 극복하고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유일한 길”이라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윤석열 대통령은 즉각 대통령실과 내각 전면 개편으로 국정 쇄신에 나설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정철학과 비전은 없고 참사 정권이란 오명만 각인시켰다”며 “주먹구구식 국정운영은 결국 인사, 외교, 안보, 경제, 안전 5대 참사로

귀결됐다”고 언급했다. 이어 “가장 끔찍한 것은 정부의 총체적 무능으로 인해 156명의 소중한 생명이 희생된 것”이라며 “윤 대통령은 국민 앞에 제대로 된 반성과 사과 한마디 없다. 오만과 독선, 불통의 국정운영만 고집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당에 왜 이렇게 맥아리가 없나. 당은 도대체 뭐 하는 것인가, 장관 한 명 방어도 못 하냐”라고 윤 대통령이 여당 지도부와 의원들에게 직접 전화해서 불만을 토로했다는 데 참모로 놀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면 여당이라도 중심을 잡아야 한다”며 “윤 대통령과 용산 대통령실에 국민의 쓴소리를 그대로 전할 용기는 없고 눈치만 보는 국민의힘이아말로 국민 입장에서

맥아리를 아예 찾아볼 수 없는 여당”이라고 비난했다. 또 정의당 이정미 대표도 이날 오전 국회에서 취임 인사차 정 위원장을 방문한 자리에서 “이태원 참사에 대해 국민이 국회를 쳐다보고 있다. 왜 이 일이 벌어졌는지 상황을 알고 싶어 하고 진짜 재발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국회에서 내놓을지 바라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날 야 3당이 제출한 국정조사요구서와 관련, “국민의힘과 함께했다면 더 좋았을 거라 생각한다”며 “정치인의 하루는 범부의 일생보다 길다”는 말이 있다. 본회의까지 한 2주간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머리를 맞대고 (논의)해나가다 보면 본회의 전까지 답을 잘 만들어낼 수 있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민주당 지도부 대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정청래, 박찬대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 야당 대표 죽이기로 독재 장기화 꿈 꿔”

민주, 이재명 최측근 정진상 강제수사 비판... “압색영장은 창작물”

더불어민주당은 10일 검찰이 정진상 당 대표 정무조장실장에 대해 강제수사에 나선 것을 “국면전환용 정치쇼”로 규정하고 정부와 검찰을 거칠게 비난했다. 검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며 수사의 칼끝이 이 대표를 향하자 공세 수위를 한층 끌어올리며 엄호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조장식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간담회를 열어 “윤석열 검찰의 압수수색은 야당 파괴를 위한 정치공작 쇼이고, 이태원 참사 추모 여론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 쇼”라고 비판했다. 조 사무총장은 “야당 대표 죽이기를 위한 공작 수사로 민주당을 와해해 총선, 대선까지 노린 검찰 독재 장기화를 위한 기획수사”라고 덧붙였다. 박찬대 최고위원은 전날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

수색 영장은 기초 사실관계도 파악하지 않은 창작물”이라며 “영터리로 급조된 영장을 제출할 정도로 검찰이 다급했다”고 꼬집었다. 박 최고위원은 이어 “검찰이 무죄 추정의 원칙을 버리고 피의사실을 무차별적으로 흘리며 여론재판으로 몰아간다”며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게 아니라 정치를 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의겸 대변인은 김용 민주연구원장과 정 실장의 혐의를 다른 언론 보도를 열거하며 일일이 반박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이 혐의를 뒤집어씌우는 게 대단히 반박하고 기초가 부실하다”며 “정 실장 압수수색 영장에 이재명 대표 이름이 72번 등장하는데 이 대표를 영장에 끼워 넣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동시에 윤석열 대통령 취임 6개월을 맞아 대통령실 이전 관련 각종 의혹을 고리로 역공에 나섰다. 특히 민주당은 이날 ‘대통령실 관련 의혹 진상규명단’ 회의를 열어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국정조사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태원 압사 참사’와 함께 대통령실 이전 의혹에까지 국정조사 카드를 꺼내 들어 다수 의석을 통해 전방위로 여론을 압박하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진상규명단 단장인 한병도 의원은 “관저 리모델링 공사의 계약 갱신을 통한 추가 예산낭비 문제, 대통령실 집기류 신규 구매를 위한 형세 낭비 문제, 청와대의 종속 개방과 재할용 조형물 설치 문제 등을 추가로 밝혀냈다”며 “이에 따라 최소 1조 806억 3600만원이라는 형세가 대통령실 이전으로 낭비될 것으로 추산된다”고 했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연합뉴스

“광주도시공사 제작 트로트 ‘무등산’ 사업 취지 의문”

강수훈 시의원, 행정사무감사서 지적

광주시의회 강수훈(민주·서구1) 의원은 10일 “도시공사가 지난 6월 ‘지역특화형 음원 제작용역’을 통해 만든 ‘무등산’이라는 트로트곡이 공사 본연의 사업 취지의 용역에 적합한지 의문이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이날 광주도시공사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시재생과 주거복지, 체육시설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광주도시공사 본연의 업무와 동떨어진 용역 추진 배경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강 의원은 “지난 4월 광주시 24개 공공기관 부기관장 회의에서 도시공사가 편 시터 조성을 목적으로 음원 제작을 실시하겠다는 기획보고를 한 뒤 3개월 만에 일사천리로 제작이 완료됐다”며 “광주에

는 문화콘텐츠와 관련한 정보문화산업진흥원, 문화재단, 관광재단 등이 있는 데도 굳이 관련성도, 전문성도 부족한 도시공사가 음원 제작을 한 것은 명백한 오류”라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이어 “음원 제작 용역에서 가장 중요한 저작권 문제도 계약서상 도시공사가 최종적으로 소유해야 함에도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확인 결과 음원저작권은 제작자인 A씨로 돼 있어 명분도 없고 소유권도 뺏겨버린 부실 행정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다”고 질타했다. 여기에 당초 광주시 홍보대사와 연계해 지역 홍보 마케팅을 추진기로 했음에도 정작 해당 노래를 부른 가수는 광주시 홍보대사와는 무관한 점, 9월 초 역대급 태풍 ‘힌남노’가 북상하는 상황에서 이례적으로 광주시청에서 신곡 발표회가 열린 점, 이

후 각종 축제에 이른바 ‘밀어주기 행정’이 이뤄진 점 등도 석연찮은 점으로 지적했다. 강 의원은 특히 “도시공사의 음원 제작은 여러 정황상 공사 측의 순수 의도로 보기 어렵다”며 “40여 개에 달하는 ‘광주의 노래’가 존재함에도 2000여 만원의 형세를 투입하며 무리한 용역을 추진한 배후가 궁금하고 필요할 경우 도시공사를 상대로 한 감사도 시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도시공사 측은 “음원 제작은 도시공사가 편 시터 광주를 위한 특화사업의 하나로 추진한 것이다”면서 “저작권은 작곡가의 권리고, 도시공사는 음원제작권자로서 음원관리 전문업체와 계약한 후, 유통에 따른 수익을 확보하게 됨에 따라 음원 소유권은 있다”고 밝혔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토지매매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합계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 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급매”

법인까지 함께 인수.

전라남도 나주시 동수동 391-3

(전라남도 나주시 혁신산단길 12-8)

대지 공장용지 12114.6 (3,665 평)

건물 1)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단층공장 1,326 (400 평)
2) 일반철골구조 판넬지붕 2층 사무실 234.6/234.6 (70/70평)

소유자 (주) 크로스지 - 2011년 설립, 제조업

재무액 현황
금융권 채무 33억8천만원 기타채무(1곳) 4억5천만원
시보조금 7억 (공장등록 5년후 소멸)
* 인수총액 39억8천만원
실인수금액 6억 (기타채무 4억5천 상환포함)

010-3812-1394, 070-7747-1399

꼭! 받아야 할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 맡겨주십시오!
새로운 방법으로 저희는 추심합니다.
25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 등 파악
- 사망으로 상속채권·채무 전문 무료 상담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24시간 상담가능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직통전화 062)521-4109
010-2860-4700